

‘도시미래농업 실현’ 6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 위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전주시가 올 한해 기후변화와 농업 인구 감소 도시민의 농업 수요 다변화 등 변화한 농업환경과 여건에 따라 도시미래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5일 2025년도 신년브리핑을 통해 ‘도시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를 비전으로 한 농업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유통·가공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맛있는 먹거리돌봄 사업 확대 △도시농업 인프라 확대 및 치유농업 활성화와 △생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기반 구축이다.

먼저 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공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 급식 확대와 공공 조달체계 강화를 위한 ‘먹거리를 합치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를 통해 학교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공동가공시설을 제공하여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오는 12월 완공될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5일 2025년도 신년브리핑을 통해 ‘도시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를 비전으로 한 농업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공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 급식 확대와 공공 조달체계 강화를 위한 ‘먹거리를 합치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를 통해 학교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공동가공시설을 제공하여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공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 급식 확대와 공공 조달체계 강화를 위한 ‘먹거리를 합치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를 통해 학교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공동가공시설을 제공하여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오는 12월 완공될

또한 시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ICT 적용 스마트 영농시스템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 △영농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현장기술 지원과 멘토링제 기술 전수, 지원사업·성공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핵심 농업인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업 기반 시설과 농기계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등도 확대된다.

동시에 미래세대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아동·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학교무상급식 단가 인상 및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 개선을 돕기로 했다.

끝으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예절교육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강화 △임양 활성화와 사후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급식소 운영 확대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계속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농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강화하고, 미래형 농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는 스마트 농업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성철 전주청소년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함께라면 확대 운영 개소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주함께라면’ 8곳으로 확대

청소년 고립 예방 위해 라면카페 운영

전주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청소년센터와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도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위험 대상자 발굴을 위해 누구나 라면을 기부하거나 먹고 갈 수 있는 ‘전주함께라면’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5일 전주청소년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성철 전주청소년센터장, 김희인 청년식탁 사잇길 대표, 전주지역 청년, 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함께라면 확대 운영 개소식’을 가졌다.

시는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발굴을 위해 그간 6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온 무인라면 카페 ‘전주함께라면’ 공간을 전주 청소년센터(완산구 중앙동)와 청년식탁 사잇길(덕진구 금암동) 등 2곳에 추가 조성해 총 8곳에서 운영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주함께라면’ 7·8호점 확대 운영은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매개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부담 없는 한 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라면카페 공간을 통한 소통과 나눔, 교류의 기회 제공 및 복지상담 등 서비스 지원과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년·청소년 대상 기관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주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이 준비한 전주함께라면 창작시 낭송회가 펼쳐졌으며, 전주함께라면 나눔 캠페인 성금 및 후원 물품(라면)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전주시 청년과 청소년에게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발전방안’ 시민 목소리·현장서 찾다

우범기 시장, 호성동 현장행정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 한해 추진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민원과 전주 발전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기 시장은 5일 건지도서관과 소양천변, 오산마을 등 호성동 일원에서 2025년 직접 35개 동을 순회하며 전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건지도서관 인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소양천변로 가로등 설치 △오산마을 고인돌 유적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 등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호성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곳들이다.

먼저 우 시장은 건지도서관을 찾아 현재 추진 중인 건지도서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도서관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동부권(건지) 반대비 체육센터 건립 부지도 함께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증축되는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일부 부지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 시장은 또 동부권(건지) 반대비 체육센터가 호성동과 우아동뿐만 아니라 전주시 동부권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체육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양천변로 자전거도로를 찾아가로등과 CCTV 설치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 및

CCTV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시 담당 부서는 국가하천인 소양천의 관리 주체인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가로등이 없는 구역내 가로등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산마을 고인돌 유적을 찾아 오산마을 주민들이 요청했던 고인돌 유적 발굴과 보존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고인돌 보존방안과 함께 시민들이 함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 보니, 전주 발전방안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각 동을 순방하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잘 대응해 전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일상 속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장거리를 줄이고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 속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에 나선다.

완산구는 기존 연 2회 운영하는 장보기 행사를 2025년도 상반기 매 주요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 방법으로는 2월부터 매 주요일마다 전통시장과 부서를 지정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에서 장보기와 점심식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5월에는 남부시장에서 완산구청 및 인근 동의 참여로 진행, 12월 신중안시장, 19일 서부시장, 26일 동부시장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에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국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